정부 ‘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강화방안’ 발표  
  
  
  
클립아트코리아정부가 수도권에 쏠린 창업 생태계를 비수도권에도 안착시키기 위해 5800억원 수준의 ‘지역 전용 벤처펀드’의 규모를 2년 내로 1조원 이상으로 불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.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‘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’을 발표했다.그간 우리나라 창업 생태계는 양적·질적으로 성장했으나, 벤처투자 비중의 80%가 수도권에 몰려있는 등 지역 간 불균형 성장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많았다. 지역에서 창업한 회사가 지역에서 성장해 지역 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연결 고리가 끊어진 것이다.먼저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지역전용 벤처펀드 규모를 1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. 현재 모태펀드 출자금 1천억원을 마중물로 삼아 총 5800억원 규모의 지역전용 벤처펀드가 조성돼있다. 모태펀드 출자금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년 내로 지역전용 벤처펀드 규모를 추가로 4천여억원 더 불려 지역 창업 생태계 안착에 나서겠다는 것이다.지자체·법인 출자 상한선도 높여 민간 출자자의 부담도 낮춰준다. 지방자치단체가 개인투자조합에 20% 이상 출자할 경우, 지자체와 법인의 출자 상한선을 현행 30%에서 49%까지 올리기로 했다.연구개발, 디자인, 법률·회계 등 창업 기업을 돕는 전문서비스 기업의 역량 강화에도 나선다. 지역의 주력산업과 연계된 지식재산권(IP) 전문인력을 늘리고, 바우처 사업 공급기업 선정 때 지역 전문서비스 업체에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.최 부총리는 “이번 경쟁력 강화 방안을 통해 지역 내 창업생태계를 한 단계 성장시키고 나아가 글로벌 창업 허브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”고 말했다.